

4월 국회 대치 거듭 충돌 불가피

8일 원내대표 회동... 장관임명시 첫날부터 진통 '탄력근로·최저임금·추경' 여야 공방 거세질 듯

8일부터 시작해 내달 7일까지 계속 되는 4월 임시국회는 여야가 모든 사안에 있어서 대치를 거듭할 것으로 보여 전망 자체가 안갯속이다.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쟁점 법안들과 '미세먼지·선제적 경기 대응'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이 다뤄지는 만큼 여야가 곳곳에서 충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8일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되지 않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할 가능성이 있어 4월 국회 첫날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논의가 4월 국회의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합의안에 따라 6개월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1년 확대'를 주장해 절충안 마련 여부가 주목된다.

다만 일부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추가 계도기간이 지난달 31일로 끝나 사업주들이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 만큼 여야가 비판 여론을 의식해 극적 합의를 이뤄낼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문제를 꼭 해결해야 하는데 3월 임시국회가 정쟁으로

치달아 국민에게 실망을 안겼다"며 "싸울 때 싸우더라도 이들 민생 법안은 통과시키면서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주 52시간제 추가 계도기간이 종료돼 법 위반시 처벌이 이뤄지는 만큼 빠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며 "여당과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 최대한 절충안을 만들어 내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가 미세먼지 문제와 선제적

경기대응 등을 위한 추경안을 오는 25일을 전후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만큼 이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미세먼지 문제와 강원도 산불, 포항 지진 등 국가적 재난 복구를 위해 꼭 필요한 추경안이라며 야당에 압박을 가할 방침이다. 반면 한국당은 예비비 소진이 먼저라고 주장하며 송곳 심사를 통해 '세금 퍼주기 추경'을 반드시 막아 내겠다고 버리고 있다.

기존 후보자 낙마에 따라 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새롭게 지명되면 여야는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또다시 거친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 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한 이견 등으로 담보상대인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도 주목된다.

한국당이 여전히 반발하고 있고, 바른미래당은 4·3 보궐선거 참패에 따른 내용을 겪고 있어 패스트트랙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보선 후폭풍이 강해 패스트트랙 논의가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없다"며 "민생법안 처리에는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임정 100주년, 청사 외벽의 독립운동가 현수막이 걸려 있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나흘 앞둔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외벽에 의열단원 김상옥 의사, 윤봉길 의사, 유관순 열사, 이봉창 의사의 모습이 담긴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정의-평화 공동교섭단체 구성 '안갯속'

제안받은 평화당 결론 못내 9일 의총 열어

지난 3일 경남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정의당이 민주당에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정식으로 제안 했지만 민주당은 결론을 못내려 이어 오는 9일 의총에서 논의하기로 했지만 결과 도출이 쉽지 않아 보인다.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정의당에 비해 평화당 내부에서는 정의당과의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상존하고 있어 교섭단체 구성에 난항이 예상된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지난 5일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을 복원해 국회를 바꾸고 정치를 바꿔나갈 수 있도록 민주당이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논의해주시길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선거제 개혁, 민생입법 처

리, 권력기관 개편 등 쏠쏠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평화당이 정의당과 다시 손을 잡을 때가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4월 임시국회를 곧바로 열어 개혁 입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4월 국회에서는 사법농단 법관 탄핵과 5·18 망언의원에 대한 제명도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여영국 의원이 국회의원 선서를 하고 의정 활동을 시작한다. 여 의원의 당선으로 정의당 역시 6석을 회복했다"며 "이제 다시 공동교섭단체

구성의 조건이 갖춰졌으니 평화당에 정중한 마음으로 (공동교섭단체 재구성)을 요청드린다"고 거듭 말했다.

민주당은 5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정의당과의 공동교섭단체 복원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평화당은 이에 따라 오는 9일 저녁 의총을 다시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최경환 원내대변인이 의총 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최 원내대변인은 "오늘 국회 본회의 참석 문제로 10~15분 정도 짧게 의견을 나눴다"며 이같이 전한 뒤 의총을 다시 열어야 이 문제를 논의하려는 것은 "성급히 결론 낼 일이 아니고, 당의 진로와 관련한 중대사항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정기 브리핑

황주홍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 통과

해양심층수 개발법 개정안 등 4건

민주당 황주홍(고흥·보성·장흥·강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4건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해양심층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황 의원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해양심층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자로 나와 "피성년 후견인이라는 이유로 해양심층수개발법 등의 면허 또는 등록 등이



취소된 경우 2년 간 면허 또는 등록이 금지되는 현행 규정을 개정해서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면허 또는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양심층수의 개발 등과 관련한 혐의 대상 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이 정한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강병운 기자

"보건의료 종사자 근무여건 크게 개선"

윤소하 의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 환영

정의당 윤소하의원은 지난 5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위원회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의료기관내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보건의료인력법이 최초 발의된 지난 2012년 7월 이후 8년만에 법제화됨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의료인을 포함한 보건의료 기관에서 일하는 인력에 대한 실태 조사와 근로조건 개선 등 다양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의료인과 보건



의료기관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3년), 종합계획 수립(5년)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수급 ▲의료기관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보건의료인력전담기구 설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정부가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고용과 처우를 책임있게 관리함에 따라 이들의 근무여건이 크게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국회 윤리위 5·18징계 상정 또 불발

한국·바른미래측 갑작스레 불참 통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자문위)는 지난 5일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5·18 모독' 등과 관련한 국회의원 징계안을 상정하지 못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추천 자문위원들이 일제히 불참하고 더불어민주당 추천 자문위원들만 참석 했기 때문이다.

다만 자문위는 오는 9일 징계심의만료 기한을 맞아 한 달간 연장 요청을 하고, 오는 17일과 5월 3일과 9일 세 차례 회의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 추천인 장훈열 자문위원장은

50분간의 회의 끝에 기자들과 만나 "어제 바른미래당 추천 위원으로부터 불참 통보를 받았는데 전혀 예상치 못했다"면서 "4월 9일 징계심의 기한이 만료돼 연장 요청을 하고, 추후 회의 일정도 잡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당 추천 위원들이 사퇴 의사 표명 후 참석을 거부하고 있어 정상적 진행이 불가능하다"면서 "한국당은 사퇴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5·18 모독' 징계안을 발의한 바른미래당은 추천 위원을 다음 회의에 꼭 참석시켜달라"고 덧붙였다.

/서울·강병운 기자

오피스텔 [급매]

- 상무지구 6층 (상가 겸 주택)
- (주거.사무실가능 / 방 2개 가능) 23평
- 전체 울수리, 내부 깨끗
- 보 500만 월 50만

시세 1억3천
급매 8천400만 (용3천만)

☎ 062-382-5500
010-6670-9800

신축 원룸 매매

- 광산구 산정농협 뒷 1분 (코너)
- 1층 - (상가)
- 2층 - (원룸5개).3층(원룸5개)
- 4층 - 최고급 주택 (A.P.T 35평형)
- 즉시 입주가능 → 월수익 500만 (주인 거주시 400만)
- ▶ 매가 8억6천만 (용2억5천, 보 1억)

062-382-5500 010-6670-9800

법률 경매 (주)대신경매

★ 경매교육 (일반·특수) ★

- ① 특수 (유치권, 지분, 법지, 개발권)
- ② 사무실 함께 쓰실분 → 주 1회스터디 (기초 실전반·특별반) → 매주 (월, 수)개강

상가건물 / 근린주택	근린 상가 / 주택 / APT
북구 문흥동 (7층 중 6층 상가) 전용 - 226평 대단위 아파트 (코너위치) 상업지 모토임종 가능 ▶ 감정가 14억8천 → 최저가 4억2천만	1. 상무지구 7층 중 7층 (전용 40평) ▶ 감정가 2억4천 → 최저가 1억1천 2. 광산구 우산동 (4층중2층) (전용 121평) ▶ 감정가 14억 → 최저가 6억3천 3. 광산구 송정동 (주택) 광산구청 바로 앞 ▶ 감정가 4억6천 → 최저가 1억4천 4. 광산구 운남동 마트 (아파트 상가) 토 74평 건 117평 ▶ 감정가 3억4천 → 최저가 2억3천 5. 서구 내방동 내방주공 (24평) ▶ 감정가 1억6천 → 최저가 1억1천2백 6. 서구 지평동 (대우금호아파트) (24평) ▶ 감정가 1억8천 → 최저가 1억2천7백 7. 서구 풍암동 (신암마르세인) (32평) ▶ 감정가 2억5천 → 최저가 1억7천5백 8. 서구 금호동 (일신아파트) (42평) ▶ 감정가 2억6천6백 → 최저가 1억8천6백
1. 서구 풍암동 (상가주택) [대단위아파트 내 위치] 토 110평 건 233평 ▶ 감정가 10억5천 → 최저가 7억3천5백 2. 서구 화정동 (상가주택) (광덕고앞 코너) 토 69평 건 78평 ▶ 감정가 3억8천 → 최저가 2억6천6백 3. 상무지구 7층 중 6층 (전용 60평) ▶ 감정가 4억 → 최저가 1억8천 4. 상무지구 아파트상가 1층 (전용 35평) ▶ 감정가 16억3천 → 최저가 7억3천	

062-382-5500 010-6670-9800